

# 세계화 · 정보화와 북한의 국가정체성 : '주체 사회주의'의 지속과 변화

김 갑 식\*

- |                          |                           |
|--------------------------|---------------------------|
| I. 서론                    | IV.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 |
| II. 북한의 국가정체성: '주체 사회주의' | V. 결론: 북한 정체성 변화의 이론적 함의  |
| III. 세계화 · 정보화와 북한       |                           |

## Abstract

### Globalization and the State-Identity of Nor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Juche Socialism*'

This paper analyzes what globalization impacts on 'Juche Socialism'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North Korea's socialist state forming and tries to gain some clues to the prospect for North Korea's changes. North Korea has dual strategy in the ruling class and has been demanded limited changes from below. Thus, there have been no less changes of the state-identity of 'Juche Socialism' First, 'Juche Ideology' has been pure ideology and

'Military-First Ideology' has performed the role of practical ideology. Second, collectivist equalitarianism has declined and individualist pragmatism has mounted. Third, North Korea is trying to drive 'Self-Reliance' assertively accepting advanced science-technology and seeking '*Silli*' ('*Silli*' meaning profits) through not insulation but involvement. Fourth, North Korea is expanding 'Our Nation-First Spirit' into all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Globalization, State-Identity, 'Juche Socialism,' 'Military-First Ideology'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I. 서 론

세계화는 경제의 세계화, 국가 간 상호연계성의 심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소 냉전체제의 종언 및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자유화 및 시장화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저장·분배에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나 통신기술 등을 비롯한 정보기술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세계화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둘은 상보적 관계에 있고 국가의 경계(territoriality)를 약화시키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정보화와 더불어 냉전의 해체는 그동안 억제되어온 종족, 종교, 이익 등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 획득 또는 변화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치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부응하지 못한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끌려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정체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피포위 의식의 심화, 경제적 침체와 대내 통합력의 약화, 국제규범들과의 갈등 등에 직면하여 당면 국제사회 변화의 수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과거 정체성에 집착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내외적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즉 수세적 상황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름의 ‘주체적’ 대응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성요소가 유지되거나 변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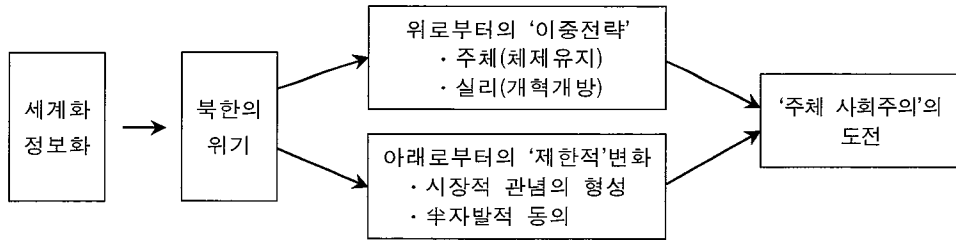
과거 국제정치경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북한이 세계화·정보화·탈냉전이라는 외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현 시기 ‘전지구적 현상’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 과정과 전망을 분석함에 있어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을 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즉, 세계화·정보화 시대 북한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북한 체제변화의 경로와 속도를 전망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sup>1</sup>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p. 64, pp. 117-118.

<sup>2</sup> 북한의 정체성, 체제변화, 의식변화 등에 대한 연구로는 김근식, 서보혁, 정영철, 최봉대의 글이 대표적이다. 김근식은 김정일 시대의 체제변화를 발전전략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수령제, 폐쇄적 자립경제, 주체사상 등을 내용으로 한 기존 주체 사회주의가 수령제 약화 및 내각의 역할 강화, 국가 주도의 실리추구적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주체사상의 약화 및 개인주의적 실용주의 등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리 사회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서보혁은 북한의 정체성을 집단주의의 일종인 민족주의적 정향과 특수주의의 하나인 주체형 사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형성된 ‘주체 사회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체제 변화의 전망을 고찰함에 있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세계화·정보화와 북한의 정체성 변화



## II. 북한의 국가정체성: ‘주체 사회주의’

일반적으로 정체성을 거칠게 표현하면 ‘특정 주체를 계속 그 주체로 남게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sup>3</sup> 그리고 국가정체성은 집단적 독특성과 목적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국가별로 특수한 주권을 의미한다.<sup>4</sup>

회주의로 규정하고 이것이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영철은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제된 상황’에서 ‘집단적 선택’의 결과라는 ‘이중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주체와 실리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당면에서는 ‘실리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실리를, 외형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북한식 개혁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봉대는 1990년대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면서 사회적 잠재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비물질적 힘으로서 ‘멘탈리티’를 설정하고 이를 집단주의, 온정주의,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신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 (2003); 서보혁,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 (서울: 책세상, 2003);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최봉대, “북한 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 (1999).

<sup>3</sup> 홍윤기, “지구화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세계화와 자아정체성』 (서울: 이학사, 2001), p. 62.

<sup>4</sup> Jepperson, Wendt, and Katzenstein, “Norm,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59-60. 국가는 물론 개인이나 집단도 각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

여기서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인 ‘주체 사회주의’로 명명한다. 북한은 1960년대 수령중심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구축한 이래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표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른바 ‘주체 사회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국가정체성 확립은 북한의 역사구조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식민지 경험 및 해방, 한국전쟁, 냉전체제, 분단상황 등이다. 여기에 노동당 중심의 일원적 정치체제, 공동체의식, 가부장적 사고방식,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대중동원과 체제결속의 필요성 등이 결합되어 있다.<sup>5</sup> 그 결과 주체 사회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은 주체사상을 매개로 수령제, 집단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주체사상과 수령제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의 기반은 주체사상이다. ‘수령’이 주체사상을 만들었고 이 주체사상에 의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적 통합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일반성보다는 ‘주체 사회주의’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강조한다.<sup>6</sup> 1960년대 까지 사회주의 보편성과 북한 사회주의 특수성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고 대내외적 노선갈등을 불러왔지만 결국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가자’는 주체 사회주의의 독창성이 승리하였다.

주체사상의 독창성은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 북한 특유의 유기체적 체제관으로 대표된다. 주체사상에 의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이지만 ‘자주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수령의 영도 아래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아래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야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sup>7</sup> 결국 유일적 지배체제의 특징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

며 정체성은 스스로 부여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의 구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정체성 형성의 계기에 대해서는 Robin Cohen, Paul M. Kennedy, *Global Sociology* (Hampshire: Macmillan, Co., 2000), pp. 344-347 참조.

<sup>5</sup> 서보혁,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 pp. 30-47.

<sup>6</sup>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간의 계승성과 독창성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정일,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옹계 인식할 데 대하여, 1976.10.2),” 『주체철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김정수,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 연구,” 주체정치학연구학회 편, 『사회주의사회연구』 (1991) 등 참조.

<sup>7</sup>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김정일 선집 8』 (평

인 수령과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추인 노동계급의 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인데, 이는 수령, 당, 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체,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과 효성의 결정체로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수령에 대한 무조건성과 절대성에 의해 ‘강제적’이었지만 고도의 ‘내적 통합성’이 유지되었다.

## 2. 집단주의

북한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북한은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으로서의 집단주의를, ‘개인적 이익을 사회적 이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인 개인주의와 대비시켜 전자를 장려하고 후자를 배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북한에서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인간개조사업의 본질 역시 북한주민이 부르조아적 개인주의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sup>9</sup> 이러한 집단주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와 같이 ‘강제적 평준화’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경제·문화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북한은 이 대중운동을 집단주의와 결합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하고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활용하였고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동원하였다.

## 3. 저항적 민족주의

북한체제를 형성한 세력이 ‘항일무장투쟁’ 세력이고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이 냉전체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제 민족의식은 국가정체성 형성의 주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47-448.

<sup>8</sup> 고태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 『근로자』, 1991년 7호, p. 27.

<sup>9</sup> 『정치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 1001.

요한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론에서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비정합성 때문에 처음부터 민족주의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는 민족주의 자체를 부르조아 민족주의로 폄하하면서 이를 부르조아의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배타주의로 간주하여 배격하였다. 대신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sup>10</sup>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민족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민족제일주의 정신은 민족의식 발전의 최고형태’<sup>11</sup>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등치시켰다.

그런데 북한의 민족주의는 ‘자주성 확보’라는 ‘밖으로부터의 자유’를 일관되게 강조하면서도 체제에 대한 인민의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며 ‘안에서의 자유’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sup>12</sup>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민족주의의 ‘저항적 민족주의’적 경향에 의해 비롯된 것이고 또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족주의관’을 수정하면서까지 국가의 정통성 확립과 대내 통합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 4. 자립적 민족경제

북한은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노선을 둘러싸고 정책대립을 벌인 결과, 중공업 우선의 축적방식, 생산력 발전에 앞선 급속한 농업협동화, 사회주의 국제분업체제의 거부, 자력갱생 원칙의 확립 등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정식화하였다. 여기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다른 나라에 예측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개 사회주의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와 대치되는 사회주의 국제분업체제는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파산을 가져오게 한다고 비판하였다.<sup>13</sup>

물론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폐쇄경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경제교류를

<sup>10</sup> 최성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p. 25.

<sup>11</sup> 고영환, 『조선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p. 67.

<sup>12</sup>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울: 당대, 1997), p. 138.

<sup>13</sup> 리성복,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3), pp. 133-134.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립적 민족경제의 주된 목표가 북한의 자주성 강화와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을 차단하기 위한, 즉 ‘외부로 부터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국제경제질서에 편입하기 보다는 인민들의 내핍강요와 자력갱생에 의거하여 중공업우선의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폐쇄경제 하의 강행적 발전노선은 1970년대까지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에 기여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을 띤 제도이었기 때문에 이후 비효율성을 노정하였다.<sup>14</sup>

### III. 세계화 · 정보화와 북한

#### 1. 세계화 · 정보화와 북한의 위기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는 냉전체제라는 국제적 상황과 사회주의 저발전이라는 국내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냉전의 해체와 시장경제의 전세계적 확산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 인식을 더 한층 느끼게 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각각 1990년과 1992년에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반면, 1995년 9월 러시아는 ‘북·미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북·중관계의 약화는 불가피하였다.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 우방이 사라져 ‘세계정치의 고아’라는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기존 사회주의 체제는 북한에게 경제적 원조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이념적 지지자였고 동반자였는데,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이제 북한은 제국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를 침탈하려 한다는 ‘피포위(被包圍) 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기본적인 대외정세인식은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sup>15</sup> 그런데 이러한 피포위 의식은 탈냉전에 의

<sup>14</sup>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맹렬,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내부구조: 내재적 접근,”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5), pp. 71-74 참조.

<sup>15</sup> 북한의 피포위 의식에 대해서는 한호석, “최근 북(조선)의 정세관과 정세 대응에 관한 분석: 1997년 상반기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http://www.onekorea.org/research/t18.html>>; 와다하루끼, 고세현 역, 『역사로서의 사회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p. 139 참조.

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승리 등에 의해 강화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체제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북한의 체제위기 인식을 심화시켰다. 본래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체제간 경쟁이라는 외부적 압력이 한층 더 두드러져 외적 위기가 내적 위기로 전환된 것이다. 북한도 남한과의 체제 간 경쟁에 의한 외부적 압력이 북한의 내적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냉전체제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원근도 잃고 탈냉전으로 인한 체제불안감의 해소도 얻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와해로 그동안 구축해온 물자조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식량, 원유, 원자재 등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산결제, 우호가격, 무상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의 우호적 거래관행이 이제 경화결제방식으로 대부분 전환되어 달러가 부족한 북한은 이들을 적기에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공장가동률은 급락했으며 연계산업 또한 타격을 받아 총체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은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한 안보위기, 경제위기 등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데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 안보의 문제로 인해 경제의 재건에 집중할 수 없으며, 경제의 개혁으로 안보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 2.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의 세계화에 대한 기본인식은 회의론에 서 있다.<sup>16</sup> 세계화가 제국주의와 다국

<sup>16</sup> 세계화(지구화)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세계화로 인해 민족국가가 쇠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초세계화론'(hyperglobalization)이다. 초세계화론자들은 경제적 세계화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사회의 주요 경제·정치 단위인 전통 민족국가를 대체하고 있거나 결국 대체할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한다. 둘째, '세계화 회의론'(globaloney)이다. 회의론자들은 세계화가 신화이며 한 민족국가가 국제적 상황에서 무력



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신화라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화를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신식민지 국제질서의 구축을 통해 세계를 자본주의화, 일체화하려는 책동으로 바라본다.<sup>17</sup> 한편, 북한은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는 정보산업 시대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보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인터넷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을 둘러싼, 이른바 ‘인터넷 딜레마’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18</sup> 엄격한 통제사회인 북한은 정치적 맥락에서 범세계적 개방형 네트워크에 따른 자유민주적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이 체제위협 요소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저개발 국가인 북한은 경제적 맥락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9</sup>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보화를 비롯한 세계화에 대해 ‘위로부터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고 ‘아래로부터는 제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1) 위로부터의 이중전략

북한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이중전략(dual strategy)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둘 다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나서는 한편, 정치사상적으로는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자 한다. 즉 ‘실리’와 ‘주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0</sup>

우선, 북한은 미국 중심의 단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 담론을 강화하고 체제수호적 정치방식과 전통적인 대중운동을 재현하는 등 주체 사회주의 고

---

화되기는커녕 국제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촉진하는 데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변환론’(transformation)이다.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변환론자들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지구적 상호연결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데이비드 헬드 외, 『전자구적 변환』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pp. 13-27.

<sup>17</sup> 리근환, “세계화와 그 경제적 후과,” 『경제연구』, 2002년 3호, p. 54;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997.6.19),”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30.

<sup>18</sup>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를 참조.

<sup>19</sup> 북한은 그 해결책으로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통제하는 인트라넷(Intranet)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1월부터는 그동안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인트라넷 개념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북한이 말하는 전국 컴퓨터 네트워크는 국제 컴퓨터망 즉 인터넷과 잇닿아 있지 않은 ‘국가범위의 거대한 인트라넷’이다. 『조선신보』, 2003년 2월 1일.

<sup>20</sup>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pp. 36-37.

수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직면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을 들고 나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하고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sup>21</sup>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쏘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이 다 망하였지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회주의 길로 계속 꺾끗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sup>22</sup>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이요, ‘전 인류적 가치’요 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나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를 계급적으로 변질시켰(고, 이는) 다름아닌 부르쵸아적 사고방식, 부르쵸아적 가치관”<sup>23</sup>이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북한은 ‘평화적 이행’ 전략을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분자들을 선동하여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자본주의로 복귀시키려는 책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4</sup>

둘째, 북한은 미국 중심의 ‘1극화 체제’에는 반대하지만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관계의 다각적인 발전과 ‘다극화 체제’ 또는 ‘지역적 일체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한은 “랭전 후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1극화 세계를 수립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나 대국들과 많은 나라들이 특정한 령강의 지배적 지위와 독점권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결과 세계정치구조는 점차 다극화 구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 무제한한 시장확대와 지배와 략탈의 독점적 국제질서수립을 노리고 있지만 그것도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sup>25</sup>고 현 정세를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은 세계지배를 실현하는 데서 방해로 민족국가라는 장벽과 민족의식이라는 정신적 성채를 허물려고 ‘미국식’이라는 명령에 ‘세계화’라는 면사포를 씌워 지구에 퍼뜨리고 있다”<sup>26</sup>고 비판하면서도 “로씨야와 중

<sup>21</sup> 김일성,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1992.3.13, 1993.1.20, 3.3),”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07.

<sup>22</sup>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1994.4.16),”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52.

<sup>23</sup>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5.6.19),”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67-68.

<sup>24</sup>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1990.5.24),” 『김일성 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18.

<sup>25</sup> 『로동신문』, 2002년 1월 16일.

국이 미국의 1극 세계화 책동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며 유럽동맹국들이 유럽을 통합하여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sup>27</sup>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맞서 각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지 못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책동에 녹아 나 나라의 자주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민족자체가 사멸하게 된다”<sup>28</sup>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책동을 짓부실 수 있는 기본방도는 매개 나라들이 자기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주적 원칙을 구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회, 자주성에 기초한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sup>29</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남협조, 즉 개발도상국가들의 공통된 지향과 이해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집단적 자력갱생’으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며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인데, 이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창설, 아프리카동맹 창설, 중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서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높게 평가하였다.<sup>30</sup>

셋째, 북한은 체제고수의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전통적인 대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이다.<sup>31</sup> 북한은 경제는 침체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군사가 무너지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되고 따라서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 조건이 보장되게 된다는 이유로 선군정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sup>32</sup> 선군정치로 북한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제국주의 침탈에도 맞설 수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다.<sup>33</sup>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담론이 ‘혁명적 군인정

<sup>26</sup> 『로동신문』, 2002년 11월 12일.

<sup>27</sup> 『로동신문』, 2001년 1월 2일.

<sup>28</sup> 『로동신문』, 2003년 7월 10일.

<sup>29</sup> 『로동신문』, 2003년 12월 17일.

<sup>30</sup>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sup>31</sup>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26.

<sup>32</sup>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sup>33</sup>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 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신'과 '군민일치'이다. 여기서 혁명적 군인정신은 '총폭탄정신'으로 무장된 인민군대의 모범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군민(軍民)일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통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약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4</sup>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 내 긴장도를 높여 대내통합과 체제안보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8년 1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면서 '강계정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선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1999년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으로 이어졌다. 김정일은 1950년대 김일성이 강선제강소에서 시작된 천리마운동이라는 원역사(原歷史)를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재현한 것이다.<sup>35</sup> 자강도에서 시작한 천리마대진군은 '성강의 봉화'(성강제강소)로, 다시 '락원의 봉화'로 계속되었고 2001년에는 '라남의 봉화'로 바뀌었으며, 이에 많은 모범단위들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sup>36</sup> 이처럼 북한은 세계화의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자력갱생과 내부 총동원체제를 통한 주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이러한 주체 고수의 의지와 더불어 경제적 개혁·개방, 실리의 교, 정보화, 남북관계 진전 등 국가정책에 있어 실리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은 김정일이 2001년 10월 발표한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글에 기초하여 정책을 구체화한 후,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7·1조치의 핵심은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특징으로는 생산자 위주의 가격설정으로 공식경제의 정상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개별 경제단위의 자율성 확대, 사회주의 분배제도의 수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여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공장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003년 6월에는 그동안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던 '개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한 것 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주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야 누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게 될 수 있다'며 집단주의 기반이었던 온

pp. 19-20.

<sup>34</sup> 『로동신문』, 2001년 11월 8일.

<sup>35</sup> 한호석,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대진군: 1990년대말 북(조선) 정세인식의 초점," 통일학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onekorea.org>> 참조.

<sup>36</sup> 물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 등의 주된 의미가 자력갱생이라면, 라남의 봉화의 의미는 자력갱생에 더해 과학혁신이라는 차이점은 있다.

정주의와 평균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sup>37</sup> 7·1조치가 경제개혁이라면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 일련의 특구 지정은 경제개방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실리를 정책추진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면서 경제적 개혁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세계화에 대해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추진에서는 세계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려 하고 있다. 세계화가 확산된 지금의 상황이 사회주의 시장이 존재했던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도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 금융, 기술, 무역 등 여러 형태의 연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져 대외무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할 것을 밝힌 바 있고,<sup>39</sup> 최근에 들어서는 국교가 없는 나라와의 쌍무적 및 다무적 경제관계 발전 및 국제적인 경제협조에 적극 결합할 것을 천명하였다.<sup>40</sup> 이에 북한의 외교방식도 냉전 시기 진영외교와 명분외교에서 탈냉전 시기 전방위 외교와 실리 외교로 전환하였다. 탈냉전에 따른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이제 북한은 체제보전을 위해 과거의 사회주의 진영외교 대신 미국·EU·사회주의권·비동맹국가 등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내세우고 있고 경제난 극복과 세계 단일 자본주의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명분외교 대신 외자유치와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실리 외교로 변화한 것이다.<sup>41</sup>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대립과 분열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연계성은 최근 북핵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9년 1월 16일자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라는 사설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 사설을 필두로,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상,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라는 주장, 2000

<sup>37</sup> 리영민,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근로자』, 2000년 7호, p. 51.

<sup>38</sup> 『조선신보』, 2001년 2월 9일.

<sup>39</sup>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91.11.23, 26),”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30-231.

<sup>40</sup> 『로동신문』, 1998년 12월 7일.

<sup>41</sup>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를 참조.

년 7월 4일 『근로자』, 『로동신문』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등이 연이어 제기되어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사상’<sup>42</sup>은 북한 발전전략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이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표방한 것은 개발도상국이 구산업화의 진화적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개발 상황에서 최선진적인 산업경제(디지털 경제)로 개구리처럼 도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른바 ‘개구리 도약 전략’(leap-frogging strategy)<sup>43</sup>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북한은 정보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편승하여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건너 뛰어 산업화 이후의 지식정보사회로 ‘단번 도약’하여 바로 진입하려는 것이다.

## 2) 아래로부터 제한적 변화 요구

1990년대 공식 계획경제의 약화와 배급제 마비상황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존관계’(organized dependence)를 약화시켰다.<sup>44</sup>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배급이 줄어들고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식량이 100만 톤 이상 부족했고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기근 사망자가 나타났으며 많은 수의 국외 탈주자가 생길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했고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주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다.<sup>45</sup>

주민들은 국가가 자신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자신이 스스로 비공식 경제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대다수 주민들은 직접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장적 관계가 형성되고 확대되었다. 즉, 장사를 하면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게 되었고 감가상각에 대한 사고, 돈의 회전율에 대한 관념 등 시장경제적 관념 및 관계에 점점 익숙해졌다.<sup>46</sup> 또한 제한적 역할에 머물렀던 농민시장이

<sup>42</sup> 과학기술중시정책의 구조는 ①공장, 기업소의 기술개선, 즉 노후설비의 보수, 정비, 교체와 생산공정의 자동화(현대화), ②정보화, IT산업의 육성 및 발전, IT인프라의 구축, IT기술의 활용, ③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 3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문수,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기술중시정책,” 『통일문제연구』, 13권 1호(2001)를 참조.

<sup>43</sup> J. P. Singh, *Leapfrogging Develop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elecommunication Restructuring* (New Yor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p. 4-5.

<sup>44</sup>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2003), pp. 36-37.

<sup>45</sup>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10권 1호(2004) 참조.

주민들의 생계유지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마당으로 질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동안 국가에서 보장해주었던 의료·복지 문제도 이제 장마당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0년 1,027명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마당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와 ‘식량난이 해결된 후에도 장마당이 존속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100%였을 정도로 이제 장마당은 북한주민생활의 주요한 장(locale)으로 부상한 것이다.<sup>47</sup>

그리고 북한의 배급체제, 평균화된 교육, 직업보장 등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일반주민이 국가나 관료들에게 매우 강한 의존성을 갖게 만들었고 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조직망에 포섭되어 체제에 대한 자율적 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 것이었다.<sup>48</sup> 그러나 가중되는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배급과 복지에 대한 불안감과 주민들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국가의 사회통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부담이 큰 데 비해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당이나 생활총화에 대해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체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과 무관심은 체제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체제저항적 성격을 띤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반항하는 ‘일상생활형의 반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 ‘민생형 일탈’ 형태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민의 주된 반항은 일하면서 일부러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무지한 체하기, 시치미떼기, 줌도독질하기, 비방하기, 사보타주하기 등이었다.<sup>49</sup>

이처럼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주체 사회주의의 요구대로 영위되지 못하였고 주체 사회주의가 극복하고자 했던 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시장경제적 인간형의 단초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집단주의적 인간형과 병존 내지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체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은 최근 대내외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다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지향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집단주의에

<sup>46</sup> 오유석·김갑식, “도시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변화,” 『북한도시의 재구조화: 정치와 경제』, 북한연구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4.4.23), pp. 12-15.

<sup>47</sup> (사)좋은벗들 엮음,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p. 24.

<sup>48</sup>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 141.

<sup>49</sup>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pp. 363-364.

기초한 자기희생적 직업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장유유서 관념 등 기존 도덕관념이 해이해졌고 자유연애를 선호하고 있다.<sup>50</sup>

하지만 아직까지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주체 사회주의의 전성기에 비해 현재 조직생활이 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10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생활총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당원들의 생활총화에 대한 참석률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 후반기에는 조직생활 복구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非)사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가의 주기적인 단속에 의해 주체 사회주의 체제가 ‘심각히’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기존 체제에 대한 관성과 국가의 통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半)자발적’ 동의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국가의 갈등통제 양식과 대응수단이 건재하며 이것에 의해 북한체제가 ‘급격한’ 변화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IV.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

정체성의 과제가 그의 변화, 지속, 동일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정체성의 판단 기준이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이라고 했을 때, 한 나라의 국가정체성은 항상 ‘현재적 모습’으로 고착화되기도 하지만 항상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 하겠다.<sup>51</sup> 여기서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국내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세계화·정보화라는 보편성 속에서 ‘주체 사회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 선군사상 일체화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의 기반은 주체사상이었다. 일반 사회주의 국가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된 경향이 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가

<sup>50</sup> 최대석·이상숙, “북한의 대학생활과 새세대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pp. 324-326.

<sup>51</sup>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3), pp. 17, 123.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매우 강하다. 그런데 과거가 주체사상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선군사상의 시대이다. 아직까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간의 관계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 ‘주체의 선군사상’ 등 큰 틀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최근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는 퇴색하고 선군사상에 대한 강조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본래 북한 공식문헌에서 1998년부터(북한은 1995년 정초라고 주장) 정치패턴의 한 형식으로 제기되었던 ‘선군정치’가 2001년부터는 ‘선군사상’으로 격상되었고 2003년에는 신년공동사설에도 등장한 후, 지금은 ‘선군사상의 일체화’를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선군사상은 이전의 ‘붉은기 철학’ 등 과도기적 담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군사상이 등장한 배경은 첫째, 1990년대 중반의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군이 전면에서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증가된 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선도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군의 역할 증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물론 선군사상의 등장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에 대한 북한 나름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것은 총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 총대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군사상은 군사적으로 대외적 긴장조성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북한은 대미관계 등 대외관계에서 국가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협상수단과 전략은 군사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고난의 행군 시기의 극악한 식량난은 북한사회에서 군대의 역할을 현저하게 증대하였는데, 이 시기 국가의 통제체제가 이완되고 당국가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군을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의 대표적인 차이는 선군사상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1기동,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을 비롯한 기존 사회주의 혁명론에서 노동자계급과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핵심역량의 지위에 놓고 이를 혁명의 2대 역량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폐기하고, 대신 인민군대를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기동으로, 핵심으로 내세우고 군대와 민중을 혁명의 2대 역량, 사회정치적 기반으로 보며 군대와 인민의 일치를 혁명의 근본으로 바라본다.<sup>52</sup> 결국, 선군사상에서는 총대(인민군대)가 망치(노동자계급)와 낫(농민)보다 상

<sup>52</sup>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26-30.

위에 있다고 주장한다.<sup>53</sup>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군사상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붉은 기 철학’처럼 체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담론 수준의 이데올로기인지, 아니면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듯이 선군사상 역시 주체사상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의 전환과정은 점진적이었다. 처음에는 계승과 창조 중 계승을 강조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적으로 이야기하다 결국에는 창조의 관점에서 주체사상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선군사상과 주체사상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 그리고 선군사상이 북한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둘의 관계에 서만이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를 적용할 수 있다. 서만은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는 추상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맑스레닌주의이며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는 실천의 원칙과 방법을 제공해주는 모택동사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54</sup> 주체사상 체계화 과정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순수이데올로기였다면 주체사상은 실천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세계화·정보화 시대 지금은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화 되었고 선군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주체사상은 고도로 추상화되고 있고 북한의 모든 정치사상적 활동의 근간은 선군사상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주체 사회주의의 기반이었던 주체사상의 규정력과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 2. 개인주의적 실용주의 확산

세계화·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책추진 제1원칙은 실리보장이다. 여기서 실리보장이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은 국가나 개별 부문 단위에서 생산과 건설, 기업관리운영을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5</sup> 그런데 북한은

<sup>53</sup> 『로동신문』, 2000년 3월 17일.

<sup>54</sup> Franz Schu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8-24.

<sup>55</sup>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2001.10.3)” <<http://www.kida.re.kr>> (북한원전DB).

‘실리’와 ‘이윤’을 분리시켜 사고하면서 실리는 개별적 단위가 아니라 집단주의 견지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한다. 실리란 단순히 투자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이익을 선차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6</sup> 결국 북한은 실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인 집단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생산성,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sup>57</sup>

북한이 사회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이 집단주의에 있다고 강변하면서 실리추구와 집단주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포기할 경우 세계화의 확산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의해 주체 사회주의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집단주의를 배제하고 개인주의를 고취하는 사상문화는 사회주의의 적이라고 단정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를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근본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순수 ‘개인을 위한 개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동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문화”<sup>58</sup>라고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실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7·1조치의 특징 중 하나가 그동안 주체 사회주의를 뒷받침해 주었던 집단주의적 평균주의를 불식하여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를 받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공적 관계망(public network)에서 강제적으로 추방당해 자본주의적 사적 관계망(private network)으로 이 전되었다.<sup>59</sup>

이러한 경향은 계획경제의 악화와 국가배급제의 붕괴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북한의 모든 사회계층, 공장기업소, 개인들은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을 스스로 모색해야만 했다.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고 장마당에서 의료와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시장적 관계’에 익숙해졌고 교육, 취직, 인간 관계 등 모든 일상생활을 개인주의적 실용적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집단주의 의식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가 사적 관계망에 기초한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유대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사적 소유의식의 강화와 공적 무관심의 증대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점차 사회적 개인화 경향과 사적인

<sup>56</sup> 『조선신보』, 2002년 11월 22일.

<sup>57</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19일.

<sup>58</sup>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

<sup>59</sup> 장세훈, “도시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북한도시의 재구조화: 정치와 경제』 참조.

가족주의의 강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구성도 하향평준화된 평등한 집단에서 사회보장, 교육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시장관계에 내몰린 불평등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sup>60</sup>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공산주의적 성격(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 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 군중노선, 집단주의 등)이 강화되고 과도적 성격(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 독립채산제, 노동에 의한 분배,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의 이용 등)이 소멸된다’는 것과 ‘사회주의 경제는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법칙과 범주를 집단주의적 본성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경제관리이론의 핵심이다.<sup>61</sup> 이러한 점에서 실리와 집단주의 결합의 시도는 큰 일탈이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현실이 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집단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딜레마다.

### 3. ‘과학기술에 기초한 실리형’ 자력갱생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력갱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 국민의 힘에 의거하기보다는 대국에 의존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대국이 망하자 연쇄적으로 붕괴하였다고 바라본다. 따라서 자력갱생만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정도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탈냉전으로 제국주의의 고립화가 강화되는 조건 속에서는 자력갱생이 사활적 요구라는 것이다.

본래 북한이 말하는 자력갱생이란 내부자원 동원을 통한 북한경제 내부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고 대외적 관계의 축소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sup>62</sup> 그러나 세계화·정보화 시대 북한이 바라보는 자력갱생의 개념은 바뀌고 있다. 지난 시기의 자력갱생과 지금의 자력갱생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고 ‘실리를 보장하는 자력갱생’이다.<sup>63</sup>

먼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이 없는 것

<sup>60</sup> 오유석·김갑식, “도시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변화,” p. 16.

<sup>61</sup>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17-26.

<sup>62</sup> 홍승은,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100-101.

<sup>63</sup> 주선엽,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한 리해,” 『철학연구』, 2002년 3호, p. 49.

을 발굴하고 부족한 것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각종 선진적인 노동수단들을 생산과 건설에 적극 개발 도입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발전을 자력갱생의 기본내용, 기본방도로 바라본다.<sup>64</sup> 또한 북한은 과거에는 비록 낙후된 것이라고 해도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자력갱생 원칙 하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고 과학도 최신과학에 의거하고 기계설비나 생산공정도 가장 현대적인 것을 받아들여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고 생산을 확대해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5</sup>

그런데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sup>66</sup> 또한 오늘의 자력갱생이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기 때문에, 정보화와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 봉쇄와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자력갱생에 기초하고 현대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세계화와 연결시키고 있다.<sup>67</sup> 즉,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리를 보장하면서 자력갱생해야 나라의 재부를 결정적으로 늘려 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나라의 원료, 자재, 전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자력갱생이 실리를 보장하는 자력갱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리익, 전인민경제적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지 못하고 경영손실을 내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력갱생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런 현상은 더는 묵인될 수 없는 우리의 투쟁대상으로 된다.”<sup>68</sup> 더 나아가 실리를 보장하면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서는 실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도 그만두어야 하며 과거에 수지가 맞던 것도 변화된 오늘의 조건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비판한다.<sup>69</sup>

<sup>64</sup> 강웅철, “과학기술중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 『경제연구』, 2001년 1호, p. 8.

<sup>65</sup>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경제연구』, 2002년 4호, p. 2.

<sup>66</sup> 『민주조선』, 2001년 4월 22일.

<sup>67</sup> 『로동신문』, 2002년 5월 9일.

<sup>68</sup> 『근로자』, 2002년 10호; 강일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세미나, 2003년 6월 26일), p. 14에서 재인용.

<sup>69</sup>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p. 3.

변화되고 있는 자력갱생을 확산시키기 위해 북한은 ‘라남의 봉화’라는 대중운동을 전사회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이 바라보는 ‘라남의 봉화’는 ‘라남의 노동계급이 높은 혁명적 봉화이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봉화이고 21세기 투쟁과 전진의 봉화’이다. 북한은 라남의 봉화 속에 선군시대의 당일군의 전형도, 행정일꾼과 초급일꾼의 본보기도, 과학자·기술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도 있다며 과학기술발전과 실리보장의 자력갱생에 전 인민들의 곁기를 촉구하고 있다.<sup>70</sup>

이처럼 세계화·정보화 시대 북한의 자력갱생은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개입을 통해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체와 자립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 4. 민족주의의 ‘전한반도’화

북한의 민족주의 개념은 주체사상의 체계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1970년대까지는 민족주의를 배격하면서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창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제한적 긍정성을 인정하더니 1990년대 이후에는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연결시켜 주는 대동맥이고 참다운 민족주의를 연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라며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접맥시키면서 ‘참다운 민족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sup>71</sup> 즉, 맑스레닌주의가 민족주의를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민족성을 강조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상으로 바라보았다며 이를 비판한 것이다.<sup>72</sup> 더 나아가 199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1993~94년에 고조선 단군왕릉(1993.10), 고구려 동명왕릉(1993.5), 고려 왕건릉(1994.1)을 발굴·재건하면서 “평양은 인류 발상지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사에서 첫 계급국가가 성립하여 번성한 고대문명의 시원지인 동시에 대대로 도읍지로 번영하여온 조선민족 문화발전의 중심지”<sup>73</sup>라며 ‘북한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2년 10월 켈리 방북 시 북한의 핵보유 시인 사태 이후 ‘민족공조’ 주장이 강화되면서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대남정책의 총적 구호로 ‘우리민족제일

<sup>70</sup> 『로동신문』, 2002년 2월 26일.

<sup>71</sup> 김혜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235.

<sup>72</sup> 안영란, “민족주의는 진보적인 사상,” 『철학연구』, 2002년 3호, p. 39.

<sup>73</sup> 『로동신문』, 1993년 12월 10일.

주의'가 등장하였다. 본래 우리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김정일이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제기되었다.<sup>74</sup> 이후 수정 보완되다가 1989년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필승의 보검 등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강조하는, 즉 북한체제 내부의 정통성 강화의 입장에서 체계화되었다.<sup>75</sup>

하지만 최근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오랜 력사와 자랑스러운 민족성을 가진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심, 나아가서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sup>76</sup>으로 재정의 되었다. '자주적 통일에 대한 확신' 부분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정의는 2003년 7월 로동신문 편집국논설에서 주장된 바가 있다. 이 논설에서 “북과 남 온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고 안녕과 번영을 담보하는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전에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관련하여 강조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언어와 피줄,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오며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창조하였다”라는 지적도 언급하였다.<sup>77</sup>

이처럼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싼 안보위기 국면에서 '북한식' 민족주의의 근거였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주체성과 민족성' 중 전자를 약화시킨 대신 '선군정치와 6·15 남북공동선언'을 추가하고 후자를 전한반도 차원으로 확장시켜 '민족공조'의 공세 속에서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위기'의 이데올로기이다.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민족주의의 구호 아래 서로 격돌하고 그 제국주의적 침탈에 맞서 식민지 약소국가들에서 민족주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은 민족주의가 얼마나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웅변해준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가 강렬해질수록 그 만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sup>78</sup> 그리고

<sup>74</sup>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432-493.

<sup>75</sup>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89.12.28),”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43-468.

<sup>76</sup> 『로동신문』, 2004년 1월 3일.

<sup>77</sup> 『로동신문』, 2003년 7월 10일.

민족주의의 확장은 ‘주체 혁명전통’의 약화를 동반하므로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V. 결 론: 북한 정체성 변화의 이행론적 함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수령제, 저항적 민족주의, 집단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체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세계화·정보화 시대 주체와 실리를 결합시킨 위로부터의 이중전략과 아래로부터의 제한적 변화 요구로 인해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이 고도로 추상화되면서 선군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고 지도부의 집단주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내부자원 동원에 집중한 ‘폐쇄형’ 자력갱생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실리형 자력갱생으로 전환되고 있고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주력하던 민족주의가 전한반도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주체 사회주의 정체성이 지속과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과 변화의 이중성으로 북한체제 이행의 방향성과 정도를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으나 북한체제가 이행의 과정(process)에 있는 과도기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현재 북한의 변화가 ‘체제의 개혁’(reform of the system)이 아니라 ‘체제 내 개혁’(reform within the system)이라는 것과 급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점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북한에서 7·1조치 이후 시장적 교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에 의해서 경제전체의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계획, 즉, ‘관료적 조정’(bureaucratic coordination)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시장요소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우세한 상태이고 이것은 중국 개혁의 초기 단계에 상응한다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지도부가 주체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용과정에서는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시장적 조정기제, 개인주의적 실용주의가 강화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세계화·정보화의

<sup>78</sup>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pp. 143-144.



전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북한변화의 성격이 비가역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강제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체제의 진입도 예상해 볼 수 있다.<sup>79</sup>

---

<sup>79</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 178.